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하는

# 청년소통 열린회의

< 정책설명자료 >



지역	일시	장소
서울	09.25.(수) 18:3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부산·울산·경남	09.27.(금) 18:30	부산시민공원
대구·경북	10.08.(화) 18:3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10.11.(금) 12:00	경기도인재개발원
대전·세종·충북·충남	10.12.(토) 14:00	청년공간두두두

지역	일시	장소
인천	10.17.(목) 18:30	송도미추홀타워
전북	10.20.(일) 12:00	전주팔복예술공장
강원	10.22.(화) 14:00	강원도일자리센터
광주·전남	10.25.(금) 17:00	김대중컨벤션센터
제주	10.26.(토) 오전	제주벤처마루



# 목 차

## 1. 고용 · 창업

1. 청년의 지속적인 미래 능력 개발 .....	2
① 내일배움카드 .....	3
② 청년취업 아카데미 .....	4
③ 전략산업 직종훈련 .....	5
④ 청년 훈련사다리 .....	6
2. 취업준비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 .....	7
① 취업성공패키지 .....	8
② 대학일자리센터 .....	9
③ 구직활동지원금 .....	10
3. 비진학청년에 대한 취업지원 및 권익보호 필요 .....	11
① 일학습병행 .....	12
② 일반고 특화과정 .....	13
③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14
④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	15
4. 청년 창업 지원 .....	16
① 창업성공패키지 .....	17
② 창업선도대학 육성 .....	18
③ 청년 전용 창업자금 .....	19
④ 청년 창업공간 조성 .....	20
⑤ 청년 창업기업 우대보증 .....	21
⑥ 온라인 쇼핑몰 카드 수수료를 인하 .....	21

# 목 차

## II. 주거

1. 청년 주거공간 확대 .....	23
①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매입·전세임대) .....	24
②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행복주택) .....	25
③ 집주인 임대주택 .....	26
④ 청년 사회적 주택 .....	27
2. 청년 주거비용 지원 .....	28
① 2019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 .....	29
② 주거안정 월세대출 .....	30
③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31
④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	32
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33
⑥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	34
3. 대학생 기숙사 확충 .....	35
① 대학생 기숙사 .....	36

# 목 차

## Ⅲ. 학비·금융

1.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 .....	40
① 국가장학금 .....	41
② 희망사다리 장학금 .....	42
③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43
④ 국가 근로장학금 .....	48
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	49
2.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	50
① 학자금대출 .....	51
②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53
3. 청년 금융지원 강화 .....	55
① 청년 신용회복 지원 .....	56
② 사회 초년생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	57
③ 청년 금융교육 지원 .....	59
4. 청년 자산형성지원 .....	60
① 내일채움공제 .....	61
② 청년희망키움통장 .....	62
③ 기초생활보장 .....	63
④ 청년 병사 목돈 마련 지원 .....	64
⑤ 청년형 ISA 운영 .....	58

# 목 차

## IV. 문화·건강·지역

1. 청년 예술인 지원 확대 .....	66
①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	67
② 청춘마이크 사업 .....	67
2. 청년층의 건강관리 강화 .....	68
① 국가건강검진 확대 .....	69
② 마인드링크 사업 .....	70
3. 지역 육성 지원 .....	71
① 청년 귀농 장기교육 .....	72
②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73
③ 농업법인 취업 지원 .....	73
4. 지역문화 관광 육성 .....	74
①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75
② 청년 두레(관광두레 청년주민사업체) 지원 .....	76
③ 도시재생사업 시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 설치 .....	78
④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사업 .....	78

# 목 차

## V. 권리·참여

1. 청년 권리 강화 .....	80
①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	81
② 청년 소비자층 보호 .....	82
③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	83
④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84
2. 청년 고충 해소 .....	85
① 군·경·장병 대상 고충 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	86
② 2030세대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87
③ 2030세대 관련 민원 분석 .....	88
3. 청년 참여 소통 확대 .....	89
① 청년 참여 플랫폼 지원 .....	90
② 국민 생각함, 청년 정책 개선 프로젝트 .....	91
③ 국민 생각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	92
④ 청년 대학생 금융현장 소통 .....	93
⑤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청년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93





# I . 고용 · 창업



## □ 청년 삶의 문제점

- 변화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미취업자와 취업자 모두 꾸준한 직업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나,
  -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 관련 주요정책 현황

- **(내일배움카드)** 국민(재직자, 구직자)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교육비를 국가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
- **(청년취업아카데미)**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전략산업직종훈련)** 기계·동력·자동차·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 **(청년 훈련사다리)**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되지 않는 훈련과정 중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료 90%지원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그간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과 청년 희망 훈련과정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으며,
  -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 중 '스펙 쌓기용' 자격증 취득과정 또는 기술교육이 많아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
- 청년 훈련사다리('18년 시범사업)는 수강 가능한 특정 민간 훈련과정을 고용부가 지정하면서, 참여자 모집에 난항 및 수료율 저조로 폐지
- ➔ 청년들이 구직 또는 직장생활을 위해 꼭 받고싶은 훈련과정
- ➔ 희망하는 훈련·교육을 받고있지 못한 경우, 그 원인과 필요한 지원

**고용1-1****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목적**

- 국민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하거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훈련 비용을 국가가 환급하는 형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구직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비진학 예정인 고교 3학년생, 대학 졸업예정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 **(재직자)**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휴업·휴직자, 자영업자, 육아휴직자, 일용근로자 등

□ **지원내용**

- **(구직자)** 1인당 200만원까지, 일반실업자 기준 실제 훈련비의 20%~95% 지원, 훈련 완료자에게는 훈련장려금\* 지급

\* <일반훈련> 교통비(5만원), 중식비(6.6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추가장려금(20만원)+취성패 참여수당(30만원) 등

대상자 구분		지원금액
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 ~ 9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0% 지원

- **(재직자)**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5년마다 300만원 지원, 자부담 20~40%(비정규직 0~40%)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 (집체훈련)	수강료 중 60 ~ 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외국어 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원격훈련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	단, 외국어 과정은 50% 지원

- **(전달체계)** 온라인: 직업훈련포털,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상시접수)

□ **목적**

-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업무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훈련프로그램을 제공

□ **개요**

○ **지원대상**

과정명	대상자
단기과정 (현장맞춤인재 양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졸업 예정자</li> <li>- 대학 졸업(예정)자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심화훈련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300시간 이내)</li> <li>-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에서 제공</li> </ul>
장기과정 (융합인재양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이 가능한 졸업 예정자</li> <li>- 인문계열 학생들이 타 전공분야와 융합을 통해 취업시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500시간 내외)</li> <li>-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에서 제공</li> </ul>
창직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li> <li>- 전공무관(연계)형 연수과정 (교육 + 현장견학(탐방) + 취업멘토)으로 200~600시간 편성</li> <li>-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li> </ul>

- **(지원내용)**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분야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19년 기준 269개 과정)
  - 참여자는 학점인정(협약대학에 한함) 및 연수과정 수료 후 협약 기업 등으로 취업연계 지원
  - 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2단계 훈련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 아카데미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수당 지급
- **(사후관리)** 수료 후 6개월 까지 운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취업연계
- **(전달체계)** 운영기관(대학·기업 등)에서 개별 모집하며, 참여기관 및 개설과정 정보는 “myjobacademy.kr”에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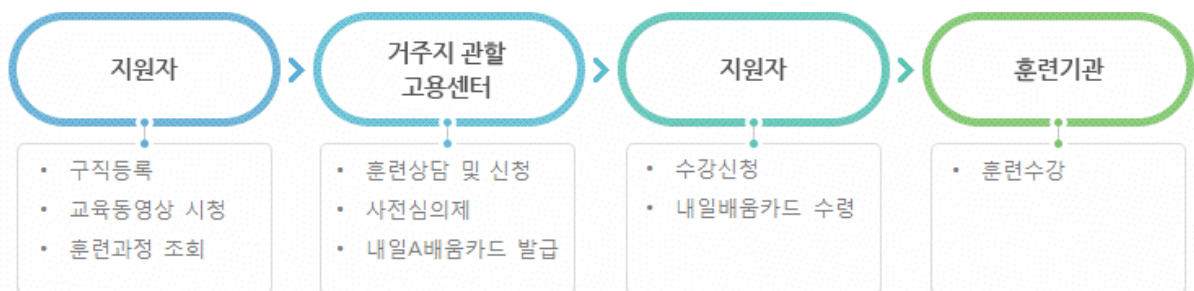
## □ 목적

- 기계·동력·자동차·전자 등 우리나라의 중요 산업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고 실업문제 해소

## □ 개요

- **(지원대상)**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생, 졸업 예정 대학생, 자활급여수급자, 여성가장 등
- **(지원내용)**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
  -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 훈련장려금은 매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6개월 간 지원

## ○ 신청절차



## ○ (전달체계) 관할 고용센터

**고용1-4****청년 훈련사다리 (18년 시범사업, 현재 폐지) (고용노동부)**

## □ 목적

- 청년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청년선호 우수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취업역량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 개요

-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I 참여청년(만 18~34세)이 참여기관에서 운영하는 지원대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수강료의 90% 지원
- **(지원방법)** 수강 결정 후 1~2개월 단위로 수강료의 90%를 훈련기관에 지원(출결 등 지원청년의 수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 **수강가능 과정**

기관	과정	수강생 수	교육시간	지역	강의비용
패스트 캠퍼스	디지털 마케팅 스쿨	60	211	서울	360
	UX/UI 디자인 스쿨	25	443	서울	360
	서비스기획 스쿨	25	115	서울	360
	프론트엔드 개발 스쿨	30	440	서울	420
	웹 프로그래밍 스쿨	30	440	서울	420
	iOS 개발 스쿨	30	426	서울	420
	안드로이드 개발 플러닝 스쿨	30	197	서울	240
	Java 웹 프로그래밍 마스터 스쿨	30	240	서울	420
전문대학교	인공지능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자 양성 과정	20	480	아산	520
남서울대학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교육 교관과정	20	480	천안	980
서울 디자인 작업 전문학교	무인멀티콥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자 양성과정	20	500	서울/경기/광주	850

- **(전달체계)** 관할 고용센터

## □ 청년 삶의 문제점

- 취업준비 과정에서 진로설정, 훈련, 지원·면접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지 못함

## □ 관련 주요정책 현황

- **(취업성공패키지)** 미취업 청년에게 단계별·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상담→직업능력 증진→취업알선)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내> 적성·전공 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진로설정 지원, <대학 밖> 인근 지역 청년에 대한 진로·취업 상담 및 특강, 경력개발컨설팅 등 청년고용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지원금)** 미취업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간 지원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훈련이나 연계하는 취업처가 청년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검색하거나 공유하는 정보에 뒤처진다는 지적
- ➔ 청년들이 구직활동 중 스스로 정보를 구하기 어렵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
-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세대 간 의견차가 크며, 청년들이 지원금을 책임감있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전반적 인식 개선 필요
- ➔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 **목적**

- 저소득층·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의욕제고(1단계) →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맞춤형으로 제공

□ **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장년 등 취업취약계층
  -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및 특정 취약계층(위기청소년(15~24세), 신용회복지원자 등)
  - **(II 유형)** 청년(18~34세, 소득무관) 및 중장년(35~69세)
-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에게는 생계지원 및 구직촉진을 위한 수당 지급

구분	1단계(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패키지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3주~1개월</li> <li>• (지원) 초기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심리검사, 취업활동계획 수립</li> <li>• (수당) 참여수당 최대 25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최장 8개월</li> <li>• (지원) 훈련비 300만원 (자부담 최대 10%), 참여수당 최대 월40만원 (6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3개월</li> <li>• (수당)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3개월), 취업성공 시 최대150만원지원</li> </ul>
패키지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1주~1개월</li> <li>• (지원) 초기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심리검사, 취업활동계획 수립</li> <li>• (수당) 최대2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최장 8개월</li> <li>• (지원) 훈련비 200만원 (자부담 최대 5~70%), 참여수당 최대 월40만원 (6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3개월</li> </ul>

- **(사업예산)** 지원인원 227,000명 목표, 예산 3,710억원
  - I 유형(고용센터 담당): 107,000명
  - II 유형(민간위탁기관 담당): 120,000명(청년 10만명, 중장년 2만명)
- **(전달체계)** 관할 고용센터

## □ 목적

- 대학에서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을 원스톱으로 연계, 학생들이 학교 내·외 자원들을 원활히 활용하여 취업하도록 지원

\* 연계기관: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IPP센터(고용부), 여성커리어개발센터(여가부), 현장실습지원센터(교육부), 창업지원기능(중기청 등), 대학 자체 취업지원부서 등

## □ 개요

- **(사업기간)** 최대 5년 \* 매년 성과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결정
- **(참여기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18년 대학일자리센터 101개)
- **(목적)** '18년 101개교 지원, 대학당 평균 사업비 연간 6억원 (소형사업 2억원)
- **(지원대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에 방문 가능 (재학생, 졸업생 모두 이용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학교가 아니라도 61개의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내용)**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건비, 프로그램비, 운영경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가 진로·취업·창업 상담 제공
  - 교육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컨설팅 등 운영
  -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진로·취·창업 지원 서비스 안내
  - 해당 학교 재학생들에 대해 진로취업전담교수 등을 통해 저학년 부터 졸업 후까지 보다 체계적인 진로지도 실시
- **(전달체계)** 대학일자리센터, 센터검색 및 상담예약은 “청년워크넷 (work.go.kr/jobyoung)”의 “우리학교 취업지원실” 페이지에서 가능

## 목적

- 청년들이 구직활동 시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개요

- **(지원대상)**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
- **(지원내용)**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금 수급 중 취업 시 지원금 중단, 다만 이 경우 취업한 직장에서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지원방식)**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현금화가 불가능한 클린카드 제공
- **(절차)** 카드 신청·발급(청년, 카드사) → 포인트 지급(카드사) → 포인트 사용(청년) → 고용센터가 카드사에 사용 내역 일괄 지급
- **(지원절차)** 지역별 월별로 할당 인원 범위 내에서 매월 선정,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비교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예비교육 진행
  - 예비교육 내용: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프로그램 지원)** 현직자 멘토링, 직무분석 교육 등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이 참여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
- **(전달체계)**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 온라인 청년센터의 경우, 청년이 신청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

## □ 청년 삶의 문제점

- 저소득 청년들이 대학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당하거나, 대학교육의 비용 대비 실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진학 청년이 증가 중
- 그러나 이들이 취업 시 직장 내 불평등을 겪거나, 법 상 노동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빈곤이 악순환되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

## □ 관련 주요정책 현황

- **(일학습병행)** 현장을 기반으로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프로그램 실시, 청년에게 일 경험 및 향후 해당기업으로의 취업 기회 제공
- **(일반고 특화과정)** 취업을 희망하는 비진학 일반고생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훈련비 전액 및 훈련 장려금(월 11.6만원) 지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고졸자가 기업 맞춤형 대학 학위과정(3년)을 이수 시, 정부·기업이 학자금 지원 및 졸업 후 해당기업에서 채용
-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확대, 직업계 고교 경력경쟁 임용규모 확대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 과제

- 정책들이 비진학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취업 후 직장 내에서 겪는 각종 차별에 대한 지원 부족
- ➔ 직장 내 학력에 따른 업무내용·승진 등 차별 및 해결 방안
-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제도는 안전 사고로 축소되었다가 졸업생 취업률 저하로 인해 금년 재확대되었으나, 안전문제 논란 지속
- ➔ 고교생 현장실습이 취업률 제고와 안전보장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

### 목적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 기업은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평가 및 자격을 인정하여, 향후 참여자가 취업 시 이 자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요

- **(지원 방식)** 기업이 청년을 먼저 채용하여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와 공동훈련센터는 보완적 이론교육을 실시하여,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
- **(프로그램)** 재학단계(특성화고, 대학교 재학생)와 재직단계(구직자, 채용 예정자 및 입사 1년 이내의 재직근로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
  - **(고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는 이론교육, 기업은 현장 실무 교육 실시, 1주일 중 2~3일은 현장교육 (2년 과정)
  - **(고교+전문대: 유니테크)** 특성화고·전문대·기업이 통합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생은 학교에서 학습·기업에서 현장훈련(2년+1.5년 과정)
  - **(대학: 장기현장실습)** 기업이 원하는 대학생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학교와 기업에서 훈련을 제공하고, 국가가 평가하여 학위 인정
  - **(재직자)** 기업이 교육훈련 기준에 따라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설계(개발), 신규채용 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 \* 학습근로자의 훈련(임금)지원: 1인당 매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사업주에 지급  
 학습근로자 숙식(제공 시) 지원: 1인당 숙식비 월 276,000원
- **(대상기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전달체계)** 참여기업이 개별 모집, “HRD-net(hrd.go.kr)”에 공지

## 목적

-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생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수요를 토대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실시

## □ 개요

- **(사업내용)**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3학생들에게 원하는 직업교육 제공
  - 고등학교 3학년이 1년(또는 6개월) 동안 학교 대신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며, 원하는 진로에 맞추어 직업교육을 받고 소속 학교에서 졸업
  - 출석/성적평가는 훈련기관에서 실시, 소속 학교 생활기록부에 등록
- **(참여자 혜택)** 훈련비 전액 지원, 80% 이상 출석 시 훈련장려금 월 11만 6천원 지급,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 실시, 고3 학생만으로 이루어진 단일반 운영
- **(참여자 의무)** 훈련기관의 출석 규정 준수(엄격한 출석관리), 훈련 받은 직종 관련 자격증 반드시 취득
- **(시기)** '19년 10월 학교를 통해 수요조사 → '20년 3월 훈련실시
- **(장소)** '18년, '19년 운영된 훈련과정 실적, 학생 선호 등을 고려하여 훈련기관을 지정(표 참고)
- **(훈련 과정)** 제과제빵, 헤어·미용 등 서비스 분야, 3D프린팅 디자인, 게임 콘텐츠 제작 등 앞으로 산업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분야 등

훈련 사업 종류	내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사물인터넷·게임콘텐츠·디지털디자인 등 향후 우리나라의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분야 관련 직종
계좌제직종	제과제빵·헤어미용·관광서비스·간호조무 등 일상적 수요가 많은 서비스 분야 관련 직종

- **(전달체계)** 참여 고등학교에서 개별 모집공고·안내

목적

- 대학의 기업 맞춤형 집중교육과 기업의 현장실습교육을 결합하여,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개요

- **(주요내용)**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1학년을 마치는 시점에 해당 기업에 취업
  - 2~3학년 중에는 학생과 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일·학습 병행, 기업이 요구하는 기본 소양 및 전공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실무경험을 쌓음
- **(대상)** 재직 경험이 없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또는 검정고시 등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 내용)** ▲1학년 필요경비 정부지원(학기당 최대 400만원 이내), ▲2~3학년 필요경비 산업체가 50% 이상 부담
- **(운영과정)** 채용조건형(이론 중심)과 재교육형(실무중심) 계약학과를 혼합하여 3년 6학기제로 운영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방식>



- **(신청시기 및 지원절차)** 참여 대학교에서 개별 모집공고 및 안내

### 고용3-4

###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교육부)

#### 비전

“고졸졸업 ▶ 대학진학” 일변도에서 벗어난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현**

#### 목표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  
(’22년까지)



학생

고졸로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성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기업

인성·기초능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고졸 인재 채용



지역

역공동체(커뮤니티) 중심의 양질의 교육·취업 활성화

정책과제		2018	2022	
<b>취업전</b> 중등직업교육 강화	직업계고체질 개선 추진 학생 중심의 중등 직업교육체제 구축 중등직업교육 기회 실질적 보장 상생·협력하는 중등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중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4차산업혁명·미래유망분야학과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지역산업 연계 직업계고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중등직업교육위원회	78개 학과 권고 없음 없음 없음 287개교 없음	
			500개 학과 1/5이상 유도 전체 직업계고에 도입 활성화 50개교 364개교 활성화	
	<b>취업시</b>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기업의 고졸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고졸 취업 지원체계 강화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공기관 고졸채용 할당제 우수 고졸채용 기업 인증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포함) 중앙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관	국가직 7.1% 기술계고 경채 20% 없음 65개 기업 없음 시·도별 자율
				국가직 20% 기술계고 경채 30% 단계적 확대 100개 기업 활성화 제도화, 1,000명
		<b>취업후</b> 고졸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자산형성 지원 확대 고졸 근로자역량 개발지원 기업 확대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 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역량개발 지원 우수기업 인증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포함) 학비 지원(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후진학자 전담과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단계적 확대 활성화 활성화 활성화 수요자 중심, 운영대학 확대 (국립대 전체 등) 단계적 확대	



□ **청년 삶의 문제점**

-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업 자금·공간·노하우 부족으로 창업을 시도하지 못하거나 창업 후 실패하는 사례 존재
- 특히 청년창업가는 초기 자본이 부족하고, 수익기반과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인건비·임차료 등의 고정지출로 인해 사업 지속에 애로  
→ 청년창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관련 주요 정책 현황**

- **(창업성공패키지)**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해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를 선발, 창업 준비공간과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계획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
- **(청년 창업공간 조성)**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센터 내에서 각종 금융·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들이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금융서비스 지원 및 교육 제공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4차 산업 등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에 지원 집중  
➔ 커피숍, 통신판매업 등 청년층의 창업 비중이 높은 **일반 창업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 공간, 보증 및 운영자금 지원 외에 **법률·행정 등 비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청년 창업가들이 비금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은 부채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재기하는데 다양한 어려움 ➔ 창업에 실패한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방안

□ 정책 개요

- (목적) 혁신적 청년 창업 CEO를 양성하기 위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들을 선발하여,
  - 창업사관학교(안산, 천안 등) 내의 사업공간과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창업 계획수립부터 최종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팀,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1년간(고급 기술의 경우 최대 2년간)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연간 최대 1억원 까지 지원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 취득 및 인증비, 마케팅비 등의 사업비 항목에 한함
-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 및 후속 사업 연계
  - (창업 공간) 13개 청년 창업사관학교(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 등)
  - (창업 코칭) 창업전문가(전문인력)를 전담교수로 배치. 진도 관리 및 창업 전 과정 지원
  - (창업 교육) 기술 사업화 및 전문지식 함양 등 창업 아이템 사업화 교육 제공
  - (창업 기술) 제품설계(CAE·역설계 등),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 (후속사업 연계) 사관학교 졸업 기업이 성장하도록 후속지원 실시
- (전달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예산) 99,222백만원('19년)

□ **정책 개요**

- **(목적)**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해당 대학이 지역의 ‘창업거점’으로 역할
  - 지정된 대학은 지역 내 예비 기술 창업가(팀)을 발굴하고, 창업준비부터 창업 후 성장단계까지 창업 소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 **(지원 대상)** 연령 · 학력 · 전공 · 취업상태 무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창업아이템 사업화 :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팀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 · 일반인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정부지원금 최대 1억 원 이내, 지원 인원 1,200명 이내, 협약기간 10개월 이내
-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교육 지원**
  - **(창업 아이템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개발, 기술정보활동비(전문가 활용비), 마케팅 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최대 1억 원)
  - **(실전창업교육 및 자율특화프로그램 지원)** 대학생 및 일반인 실전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 경진대회, 청년 창업 한마당 투어 등 지역 창업 붐 조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전달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예산)** 89,540백만원('18년)

□ 정책 개요

- **(목적)**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대출 지원 및 교육 제공
- **(지원 대상)** 사업 개시일 3년 미만인 만 39세 이하 청년
- **(지원 방식)**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 자금,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지원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기업 당 최고 1억 원(지식서비스의 경우 5천만 원)
- **(지원 내용)** 시설자금지원, 운전자금지원
  - **(시설 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소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소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설치 소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 보증금 소요 자금, 사업장 확보 자금 등
  - **(운영 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자금 등
  -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 **(대출 기간)** 5천만 원 이상 대출인 경우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5천만 원 미만 대출인 경우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 **(대출 이자)** 연 2% 고정 금리
- **(전달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 **(예산)** 130,000백만원('19년)

- (취지) 창업보육공간 제공 및 금융·非금융 패키지 프로그램 등 종합지원을 통해 청년 혁신창업 활성화
- (대상) 만 39세미만 청년 창업가\*를 중심으로 한 (예비)창업가
- (주요내용) 민관합동으로 국내 최대규모(1만평)의 「청년 창업보육 공간」 조성(‘마포혁신타운(Front 1)’)
  - (지원내용) 최장 3년 동안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 교육, 컨설팅, 해외진출 등 쏠분야를 패키지 지원
    - 핀테크, AI, 블록체인 등에 대한 전문 보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
  - (전달체계)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 내 전담조직\* 신설
    -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내 별도 조직으로 민간 전문가(AC(Accelerator), VC(Venture Capital) 등), 정책금융기관, 대학 창업지원단 등이 공동으로 지원프로그램 마련
  - (추진일정) '20.5월 준공 및 개소(계획)

## 창업1-5

## 청년창업기업 대상 우대보증 제공 (금융위원회)

- (목적) 기술형 청년창업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실시
- (대상)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특화서비스·유망서비스 부문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대표자가 만 17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운영자금 최대 10억원, 0.3% 고정요율, 보증비율 최대 100% 등 우대보증 제공(청년 희망드림 보증)
  - (전달체계) 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
- (추진실적) '17.7월~'19.4월간 1,079건, 1,822억원 지원

## 창업1-6

## 온라인 쇼핑몰 카드 수수료를 인하 (금융위원회)

- (취지) 청년 창업이 많은 온라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 '17년 국세청 발표, '16년 전체 청년창업 22.6만개 중 통신판매업이 1위(3.7만개, 16.4%)
- (대상) 영세(3억원 이하)·중소(3억원~30억원) 매출 규모의 온라인 사업자
- 주요내용
  - **온라인 사업자도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동일하게 개별 사업자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 \* 연매출 3억원 이하 : 0.8% / 3억원~5억원 이하 : 1.3% / 5억원~10억원 이하 : 1.4% / 10억원~30억원 이하 : 1.6% 등으로 차등 적용
    - \*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 매출액이 아니라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 책정
  - (전달체계) 각 신용카드사

## Ⅱ. 주거 · 복지





## □ 청년 삶의 문제점

-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며,**
  - 특히, 기숙사, 근로자 사택, 1인주택 등 **도심내 청년가구를 위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 부족**하여 청년층의 주거 불안 증가

## □ 관련 정책 현황

-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 (매입·전세임대) 19~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생을 대상으로 도심지 내 맞춤형 임대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
  -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 (집주인 임대주택) 집주인은 LH로부터 신축·보수비용을 저리로 지원받는 대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
- (사회주택)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며 장기거주 가능(최대 10년)

\* LH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 장기저리 임대,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 건설자금 융자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정부에서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
  - 특히, 행복주택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주민반대로 축소공급 등이 문제

➔ 임대주택 등 건립 시 주민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 입지·면적·형태 등 청년들이 선호하면서도 비용이 저렴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 (목적) 청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은 10.5%로 전체 5.9%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 도심지 내 맞춤형 임대주택을 운영하여 통근·통학 편의를 제고하고,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안정적 주거공간 제공
- (대상) 19~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매입임대) 월평균소득 50~100% 이하, 총자산 75~232백만원 이하
  - (전세임대)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196백만원 이하
-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 LH, 지방공사
  - (대상주택) 전용 85㎡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사업방식) LH가 시중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임대한 후, 이 주택들을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
    - \* 국가는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호당 1.5억원,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호당 평균 1억원을 LH에게 주택기금으로 지원
  - (임대조건) LH가 △매입한 주택(매입임대)은 시중 전세가의 30%, △전세로 임대한 주택(전세임대)은 시중 전세가의 30~50%로 재임대
  -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거주)
  - (예산) 1조 2,920억 원(주택도시기금)
- (추진일정) '19년 청년 매입임대 4천호, 청년 전세임대 13천호 공급 예정
- (공급실적) △매입임대 : '18년 3,319호 △전세임대 : '18년 8,163천호

## 주거1-2

## 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국토교통부]

- (취지) 도심 내 국·공유지, 공기업 보유토지, 도시재생용지 등을 활용하여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상) 19~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대학생) 무주택자로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대학·고등 졸업·종퇴후 2년내)
  - (청년) 19~39세 미혼 무주택자 또는 소득활동 5년 이내인 무주택자
-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 LH, SH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대상주택) 전용 16㎡, 26㎡, 36㎡, 44㎡, 59㎡주택
  - (임대조건) △ 대학생·無소득청년(시세대비 68%), △ 有소득청년(시세대비 72%)
  - (임대기간) 대학생·청년 6년(거주 중 취업·결혼 시 최대 10년까지 허용)
  - (예산) 1조 1,147억 원(주택도시기금)
  - (전달체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 사업자 등
- (추진일정) 19년 행복주택 1만호 공급 예정
- (공급실적) '18년 행복주택 1.2만호 공급

※ 참고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목적	젊은세대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 주거안정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청약저축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

- (취지) 집주인에게 노후주택 개량 및 운영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임대위탁계약을 위임받아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공간을 제공
- (대상) 19~39세 미혼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주요내용
  - (지원한도)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수도권 지역 30만원대, 그 외 지역 20만원대)로 주거공간 제공
  - (지원체계) 임대사업자(집주인)는 노후주택 보수·신축비용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기금으로 대환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받음
    - LH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운영을 위탁받아,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90%이하로 우선공급
  - (지원내용) 집주인에게 주택 보수·신축 비용 등으로 최고 1억원을 금리 1.5%로 지원, 청년에게는 주변 시세의 90%로 8년간 장기임대
  - (예산) 2,500억 원
  - (전달체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일정) 19년 하반기 추진예정
- (공급실적) '18년 7,513가구, 3,279억원 지원

- (취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가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장기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등 임대사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유도
- (대상) 청년(19~39세, 미혼, 무주택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LH토지를 15년 이상 장기저리로 임대,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사회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 등
  - (전달체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지원수준) 사회적 임대주택은 시세의 약 50~80% 수준으로 공급, 최대 6년간 입주 가능
  - (예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일부 활용
  - (지원유형) 일반형 주택 및 공유형(쉐어형) 주택
- (추진일정) '17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19년 2월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후 본격 추진
  - '22년까지 연간 한국토지주택공사 500호, 서울시 1,500호 공급계획
- (공급실적) 건설형 98호 공급, 매입임대 운영위탁 101호 공급 중

## □ 청년 삶의 문제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회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은 내집 마련이 어려우며,
  - 특히 경제력이 취약한 일부 청년들은 월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어려워 주거 사정 열악

## □ 관련 정책 현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
- (청년들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출 지원)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층 및 사회 초년생 대상 월세 저리 융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리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
  -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내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저축하도록 일정자격 충족시 우대이율, 소득공제 등 혜택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 청년들이 주거비용을 절감하면서 적절한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 ➔ 청년들에게 합리적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주거비용 지원 시 우선 지원대상, 지원 필요사항, 지원 수준 등)

- **(목적)** 소득·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 \* 중위소득 44% : (1인) 75 (2인) 128 (3인) 165 (4인) 203
- **(주요내용)**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에 따라 주거급여 차등 지원
  - **(임차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 **(자가가구)** 구조안전, 설비 등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별로 수선비용**(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 지원

**<보수범위별 보수한도액 및 수선주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원(3년)	702만원(5년)	1,026만원(7년)

\*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 제거, 문폭 확대) 설치를 추가지원(380만원) 하고, 고령자(만65세~)는 50만원 한도 내 신규 지원

- **(전달체계)** 국토교통부, 읍면동 주민센터
- **(급여신청)**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 (목적) 무주택자 저소득층 및 사회초년생 등에 대하여 월세비용을 저리로 용자

□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등

○ (우대형) ①취업준비생, ②사회초년생, ③자녀장려금수급자

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

②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2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요내용

○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5%, 일반형 연 2.5%

○ (대출기간)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2년단위 총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약 0.12%(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전달체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수탁은행

○ (예산 및 지원범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7조 8,442억원, 이차보전지원 1,903억원 / 7.4만 건 청년대상 자금 지원



- (목적)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 (대상)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로서(임차 전용면적 85㎡이하),
  - ▲성인인 (예비)세대주이며 무주택자, ▲부부 합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단독세대주는 35백만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국가로부터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 이하
- 주요내용
  - (대출한도) 1억원 한도, 임대보증금 100% 이내
    -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50백만원
  -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
    -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적용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전달체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수탁은행

**주거2-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국토교통부]**

- (목적)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
- (대상)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단독 청년 세대주로서,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임차 전용 60㎡이하 주택)

## □ 주요내용

- (대출한도) 35백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소득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2.7%

\* 다자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등에 대한 우대금리 및 추가우대금리 운용중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전달체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수탁은행

**주거2-5****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 (목적) 기존의 주택청약저축 대비 금리를 우대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주거상향 기반 및 목돈 마련**을 지원
- (대상)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청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인 자
- **주요내용**
  - (지원한도) 우대금리 연 최대 3.3% 지원
    - 이자소득 최대 5백만원 비과세
    - 연간납입한도 240만원 범위내 40% 소득공제 혜택
  - (우대금리)
    - 가입기간 2년 이상시 우대금리 적용하여 최대 10년간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금리 지원
    - \* 가입기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청약당첨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기의 일반이율 적용,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lt;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율(%)&gt;

구분	1개월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초과 후
일반이율	1.0	1.5	1.8	1.8
청년우대형 이율	2.5	3.0	3.3	1.8

-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에 한해 가입
- (전달체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 수탁은행

- (취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 무주택 가구의 전·월세 부담 경감
- (대상)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기준)로서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
- (주요내용) 소액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자금 지원, 기존 고금리 전·월세 자금의 저금리 전환 지원 등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연 2.8% 내외로 대출한도 7천만원까지 지원
    - (월세자금) 연 2.6% 내외로 월세 50만원 이내, 총 1,200만원 한도 지원
    - (대환자금) 기존 대출의 용도별 금리·한도 내에서 전환 지원
  - (전달체계) 13개 시중은행
  - (예산 및 지원규모) 총 공급한도 1.1조원(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천억원)으로 최대 2.8만명 지원
- (추진일정) '19.5.27.부터 13개 은행에서 상품 공급

## □ 청년 삶의 문제점

-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금자리 필요

## □ 관련 정책 현황

- (국·공립대 민자 기숙사\*) 주요 국·공립대학교에 '05년~'19년 중 수용규모 57,000여 명의 69개 기숙사 건립 사업 추진 중

\* 민간사업자는 기숙사를 건설 후 국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20년간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 회수

- (공공·연합기숙사) 총 7개 연합기숙사\* 운영(3개) 또는 공사(4개) 중, 총 41개 행복공공기숙사\*\* 운영(35개) 또는 공사(6개) 중

\* 정부가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으로 여러 대학이 활용하는 기숙사 건립·제공

\*\* 사립대학 내 부지에 공공기금으로 민자기숙사보다 저렴한 기숙사 건립·제공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국립대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는 부족

- 대학의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기숙사 수용률 21.5%, '18년 기준)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

➔ 대학 기숙사 확충 관련, 인근 원룸 주인 등 임대사업자의 반대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 기존 대학생 기숙사 외 새로운 유형의 기숙사 확충 방안

### 주거3-1

## 대학생 기숙사 현황(교육부)

### ■ 설립별 / 지역별 기숙사 수용률(운영 기준)

- 설립별 수용률(평균 21.7%) : 25.5%(국·공립대) > 20.6%(사립대)
- 지역별 수용률(평균 21.7%) : 25.0%(비수도권) > 17.1%(수도권)

(‘18.4.기준, 사학진흥재단 통계, 전문대 제외)

구 분		전체 대학수	기숙사 운영 대학수	재학생수	기숙사 수용가능인원	수용률
설립별	국·공립대	39	39	379,201	96,775	25.5%
	사립대	194	171	1,235,639	253,965	20.6%
소 계		233	210	1,614,840	350,740	21.7%
지역별	수도권	117	91	674,883	115,513	17.1%
	비수도권	133	132	939,957	235,227	25.3%
소 계		250	223	1,614,840	350,740	21.7%

### ■ 유형별 월평균 기숙사비

(단위: 천원, ‘18.4.기준, 전문대 제외)

구분	국립대		사립대			행복(연합) <sup>2)</sup>
	재정(직영)	민자	재정(직영)	민자	행복(공공) <sup>1)</sup>	
2인실(1인당)	136	177	199	332	232	208

1)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90%이하, 대학 자부담 10%이상

2)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기부금 100%

### ■ 연합기숙사 추진현황

- 연합기숙사 : 총 개사업(6,391명)(운영중 3개(3,047명) / 설계·공사중 4개(3,344명)

구 분	사업부지	총사업비	재 원	수용인원	진행경과
서울 흥제동 행복연합기숙사	국·공유지 (흥제동)	159억원	주택기금 53% 사학기금 47%	516명	운영중('14. 8월 입주, 한국사학진흥재단)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국유지 (부경대 내)	417억원	주택기금 53% 사학기금 37% 국고지원 10%	1,528명	운영중('17. 3월 개관, 한국사학진흥재단)
서울 동소문동 행복연합기숙사	국유지 (동소문동)	302억원	주택기금 53% 사학기금 47%	751명	공사착공('17.11) (‘21. 9월 입주예정, 한국사학진흥재단)
천안권 행복연합기숙사	공유지 (천안시)	164억원	주택기금 53% 사학기금 47%	593명	공사진행중 (‘20. 9월 입주예정,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 행복연합기숙사	공유지 (수창동)	310억원	주택기금 100%	1,000명	승인완료 (‘22. 3월 입주예정,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	국유지 (고양 삼송지구)	326억원	민간기부금 100% (은행연합회)	1,003명	운영중('17. 3월 개관,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연합생활관	국유지 (응봉동)	400억원	공공기관기부금 100% (한국수력원자력)	1,000명	토지교환('18.2.9) (‘21. 9월 입주예정, 한국장학재단)

## ■ 행복기숙사(사립) 추진현황

○ 행복기숙사(사립) : 총 41개사업 19,021명 운영중 35개(16,056명), 설계·공사중 6개(2,965명)

연도	학교명	수용인원 (명)	진행현황
12년 (6개)	경희대(운동장)	926	운영('17.9)
	경희대(이문동)	74	운영('14.3)
	경희대(회기동)	51	운영('14.3)
	단국대(천안)	924	운영('14.3)
	대구한의대	402	운영('14.3)
	세종대	716	운영('15.3)
13년 (7개)	경동대(문막-1)	519	운영('15.8.)
	광운대	977	운영('17.9)
	단국대(죽전)	922	운영('15.3)
	서영대	102	운영('14.3)
	충북보건과학대	230	운영('14.3)
	경동대(양주)	497	운영('16.9)
	동의대1차	770	운영('16.3.)
14년 (10개)	고신대	744	운영('17.3)
	강릉영동대	501	운영('18.3)
	제주관광대	132	운영('15.8.)
	동의대2차	858	운영('16.3.)
	경동대(문막-2)	497	운영('16.9.)
	성공회대	338	운영('19.3)
	한국국제대	580	운영('16.9.)
	한동대	538	운영('17.3)
	한양대(서울)	395	운영('17.3)
	한양대(ERICA)	788	운영('17.3)
15년 (5개)	나사렛대	298	운영('17.9)
	대경대(경산)	312	운영('18.3)
	영남이공대	304	운영('17.5)
	송원대	210	운영('16.4.)
	신한대	196	운영('17.9)
16년 (6개)	한동대2차	300	공사 중('20-1학기)
	호서대	800	설계 중('20-1학기)
	상명대	164	운영('17.3)
	영남이공대(2차)	600	공사 중('20-1학기)
	전주비전대	306	운영('18.3)
	한성대	326	운영('19.3)
17년 (4개)	인천재능대학교	300	운영('19.3)
	원광보건대학교	350	운영('18.3)
	신한대학교(2차)	398	운영('19.3)
	수성대학교	411	운영('19.3)
18년 (3개)	대구한의대학교	501	설계 중('20-1학기)
	대전보건대학교	164	공사 중('20-1학기)
	대구대	600	설계 중('21-1학기)

## ■ 국립대학 임대형 민자사업(BT)

○ 총 69개사업(57,990명(운영중 62개(53,505명) / 설계·공시중 7개(4,485명)

연도	학 교 별	수용인원 (명)	비 고	연도	학 교 별	수용인원 (명)	비 고
05	강 원 대	1,888	운영중 (‘09.2 ~ ‘29.2)	12	경 상 대	800	운영중 (‘15.3 ~ ‘35.2)
	강릉원주대	778			창 원 대	500	
	춘천교대	542			금오공대	300	
	경 북 대	1,798	운영중 (‘09.9 ~ ‘29.8)		부 경 대	1,011	운영중 (‘16.3 ~ ‘36.2)
	금오공대	446			한국해양대	1,622	
	부 산 대	1,064	운영중 (‘09.2 ~ ‘29.2)		제 주 대	500	운영중 (‘17.3 ~ ‘37.2)
	부 경 대	1,650			한국체대	560	
	부산교대	396			강릉원주대	300	
	경 상 대	1,694	운영중 (‘09.9 ~ ‘29.2)		충남대 (본교, 보운)	900	운영중 (‘15.3 ~ ‘35.2)
	창 원 대	740			군 산 대	300	
	전 남 대	3,140	운영중 (‘08.9 ~ ‘28.8)		충 북 대	1,400	운영중 (‘15.3 ~ ‘35.2)
	순 천 대	1,020			한국교원대	440	
	목 포 대	650			교통대(충주)	500	
	광주교대	350			전 북 대	600	
	전 북 대	2,500	운영중 (‘09.3 ~ ‘29.2)		경남과기대	400	운영중 (‘17.3 ~ ‘37.3)
	전주교대	256			경인교대	400	
	제 주 대	<b>618</b>	운영중 (‘09.3 ~ ‘29.2)		한 경 대	600	
	충 남 대	2,678			13	강릉원주대	
	공 주 대	1,300	금오공대			500	
	한 발 대	600	교통대(증평)			250	
공주교대	450	14	서울과기대	900	운영중 (‘18.2 ~ ‘38.2)		
충 북 대	1,618		경 북 대	1,210			
한국교원대	392	14	순 천 대	300	공사중 (‘17.7 ~ ‘19.7.)		
청주교대	362		인 천 대	1,130			
서울과기대	1,210	15	강 원 대	1,000	운영중 (‘19.3 ~ ‘39.3)		
경인교대	144		15	제 주 대		900	
한국복지대	88			목포해양대		650	
06	부 산 대	940	16	부 산 대	1,380	협상체결 (‘18.2.9)	
	안 동 대	380		부 산 대	700		
	전 북 대	960	16	한 발 대	700		
	서울교대	460		공주대(천안)	300		
07	서울대 (1)	2,500	17	인천대	1,000	고시 (‘17.12.14)	
				복지대	80		
				전남대	350		
				전북대	750		
				창원대	400		
18	경상대	462	고시 (‘18.12.14)				
19	강릉원주대	583	한도액 확정				



### Ⅲ. 학비 · 금융



□ **청년 삶의 문제점**

-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가중

□ **관련 주요 정책 현황**

- **(국가장학금 I)** 소득(8구간 이하) 및 성적 기준(12학점 이수/B이상)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연 520만 원 이내에서 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II)** 학비 부담을 완화\*한 대학에 대해 국가가 장학금 총액을 지원, 대학은 이를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들에게 배분

\*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입학금 감축 등

- **(희망사다리 장학금 I)** 일반대 3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 중 중소기업 취업 희망 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전액과 학기 당 200만 원의 취업·창업 지원금을 지원

- **(희망사다리 장학금 II)**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반값 등록금”과 같은 학비부담 완화 정책이 지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

- 대학이 등록금 활용처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학생들과 갈등 발생

➔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 수준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절차

➔ 국가와 사회로부터 학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과, 적절한 지원수준

□ 도입 배경

-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I 유형),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감축노력 유도(II 유형)

□ 주요 내용('19년)

① 국가장학금 I 유형(2조 7390억원) 및 다자녀 장학금(3,832억원)

- (개요) 성적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B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
- (운영)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적(대학)을 심사하여 수혜자 선정(개인별 소득구간 산정)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 규모) 31,222억 원, 약 107만여 명

< 2019년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 비율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지원 단가(만원)	I 유형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② 국가장학금 II 유형(4800억원)

- (개요) 대학 등록금 감축 노력 등과 연계하여 대학으로 II 유형 장학금 총액을 배분하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혜 학생 선발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 규모) 4,800억 원, 약 67만여 명

< 국가장학금 II유형 세부 유형별 내용 및 운영 방식 >

구분	목적	대학 배분 방식	학생 선발 및 지원
대학 자체노력 연계 (3,100억원)	• 대학의 자체적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 유도	• 참여대학 :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대학 • 배분비율 : $\frac{\text{대학별 노력분}}{\text{참여대학 노력분 합계}}$	•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 하되, 저소득층 우선 지원
지역인재 (800억원)	• 지역대학의 우수인재 유치·양성	• 배분비율 : $\frac{\text{대학별 신청액}}{\text{대학별 신청액 합계}}$	• 지역고교 졸업 후, 지역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선발 • 1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5구간 이하 학생은 전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 (900억원)	• 입학금 감축 잔여분 지원 (4년제 20%, 전문대 33%)	• 감축 계획 이행 사립대의 '17년 입학금 20% x 신입생 수전문대 33%)	• 당해년도 모든 신입생 • 입학금 감축 잔여분 지원

□ **추진 배경**

-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인센티브 지원
- 고졸자들이 취업 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학비부담을 완화하여 고졸 인재 성장경로를 마련

□ **주요 내용**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 **(지원 대상)**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전문대 2학년 이상 학생(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지원 내용)** 등록금 전액 + 학기 당 취업·창업 지원금 2백만원
- **(의무 사항)** 졸업 후 수혜학기 × 6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의무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필요
  - \* 단, 1기업 장기 근속 시 최대 6개월 단축(2년 의무근무를 1년 6개월로 단축)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규모)** 28,607백만원 (지원 규모 : 3,600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 **(지원 대상)** 고졸 후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고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1~4학년)
  - ※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복무,출산 고려 시 만 39세 이하) 우선 지원
- **(지원 내용)** 등록금 전액
- **(의무 사항)** 수혜학기 × 4개월 간 중소·중견기업 의무 근무(일학습 병행 권장)
  - ※ 퇴사, 이직 등을 고려 I 유형 대비 의무기간 2개월 단축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규모)** 57,800백만원 (지원 규모 : 9,000명)

**1] 인문100년장학금**

제도 개요

-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

수혜 대상

- 대상 학년 :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 3학년 재학생
  - 인원 배정 : 신규장학생 선발인원을 대학별 정원비율에 따라 배정 하되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40%:60%) 적용
  - 선발방식 : 재단은 사업참여 대학에 신규장학생 선발인원을 배정 하고, 대학은 선발기준에 따른 우수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
  - 선발기준
    - 신규선발 기준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
    - 계속장학생 기준 : 직전학기 3.5/4.5점(B+학점) 이상
- \* 계속장학생 요건 미달 시, 전공확립 유형(3학년 선발)은 영구 탈락, 전공탐색 유형은 1회 기회 부여 후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지원 범위 등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규모) 12,988백만 원 (지원 규모 : 2,670여 명)

구분	지원금액
공통	등록금 + 생활비 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200만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

## ②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 제도 개요

-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  
- '15년 신규사업('13년 국정감사에서 필요성 제기)

### □ 수혜 대상

- 대상 학년 : 예술 및 체육계 학과(부) 3학년 재학생
  - 인원 배정 : 신규장학생 선발인원을 대학별 정원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50%:50%) 적용
  - 선발 방식 : 재단은 사업 참여 대학에 신규장학생 선발인원을 배정하고, 대학은 선발기준에 따른 우수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
  - 선발 기준
    - 신규선발 기준 :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
    - 계속장학생 기준 : 직전학기 3.5/4.5점(B+학점) 이상
- \* 계속장학생 요건 미달 시 영구 탈락

### □ 지원 범위 등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규모) 2,240백만 원 (지원 규모 : 300여 명)

구분	지원금액
공통	등록금 + 생활비 150만 원* * 신규장학생 대상 선발연도 1회(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180만원

### ③ 우수학생 해외유학(드림) 장학금

#### □ 제도 개요

- 저소득층 우수학생의 해외 유학 기회 제공
  - '12년 사업 개시('14년 해외대학 진학 시작)

#### □ 수혜 대상

- 대상 학년 : 고등학생 2~3학년 유학준비생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성적기준
  - 선발 기준 : 고교 내신 3등급 이내 (어학 2등급 이내)
  - 계속장학생 기준 : 해외 대학 직전학기 평점 3.0/4.5점(B학점) 이상
- \* 성적기준 미달 경고제: 해외 대학 재학기간 동안 누적 2회 성적 미달 시 경고 실시, 누적 3회 미달 시 장학생 자격 박탈
- 선발방식 : 재단이 '서류심사 → 인·적성검사 →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

#### □ 지원 범위 등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규모) 3,953백만 원 (지원 규모 : 75 명 내외)

구분	지원 범위	금액
고교생	학업장려비 지원 ※ 원서지원비 등 고려 학년별 차등	-2학년: 월 50만원 -3학년: 월 70만원
해외 유학생	학비* 및 체재비**, 항공료*** 등 * 등록금 전액 ** 연간 2만불 이내 *** 항공료 2.5천불 이내(연간 왕복 1회)	-학비+체재비: 연 6만불 이내 -항공료: 연 2.5천불 이내



#### ④ 국가 우수 장학금(이공계)

##### □ 제도 개요

-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

##### □ 수혜 대상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 과학 및 공학 계열 학부(과)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 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지원 가능 횟수는 8회로 제한
- 선발방식 : 재단은 사업참여 대학에 신규장학생 선발인원을 배정하고, 대학은 선발기준에 따른 우수학생을 자체적으로 선발
  - 계속장학생 기준 : 직전학기 3.5/4.5점(B+학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장학생 중간평가 기준 : 직전 2년 간 4개 학기 성적이 3.5/4.5점(B+학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직전 2년 간 4개 학기 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 지원 범위 등

- (전달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규모) 43,800백만 원 (지원 규모 : 8,425명 내외)

구분	지원 내용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교재비	2008년 선발된 장학생은 연도별 교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교재비 추가 지원 (2009년부터 교재비 지원 폐지)

## 5 대통령 과학 장학금

### □ 제도 개요

-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핵심 과학자군 양성을 위한 장학금

### □ 수혜 대상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 과학 및 공학 계열 학부(과)에 입학 예정인 자
- 지원 기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선발 규모 : 140여 명(국내 120명, 지역추천 17명, 해외 10명)
- 신청 자격 : 공통자격 및 성적 기준 충족한 자
  - 성적 기준 :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이수한 수학 및 과학 교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
- 선발 기준
  - 신청 분야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 등 6개 분야 중 본인의 실적 및 전공과 가장 연관된 1개 분야 신청
  - 선발 기준 : 수학, 과학 분야의 우수성, 학업계획, 향후 사회환원 계획 등
  - 선발 방법 :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인·적성검사 → 심층 면접

### □ 지원 범위 등

- (전달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규모) 6,500백만 원 (지원 규모 : 522명 내외)
- (지원내용) <국내학생>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 학기당 2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해외장학생> 연간 5만불 이내 학비 및 체재비, 출국항공료

**① 근로장학금**

**사업 개요**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을 통한 취업 역량을 제고

**수혜 대상**

- 대상 학년 : 학부 재학생 전학년
-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2.0/4.5점(C학점) 이상
- 소득기준 : 8분위 이하
- 선발방식 : 성적 및 소득 기준 충족자에 한해, 대학이 선발
  - \* 소득별 우선선발 : (1순위) 4분위 이하, (2순위) 5~6분위, (3순위) 7~8분위

**지원 범위 등**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규모) 277,423백만 원 (지원 규모 : 132,000여 명 내외)
- (근로시급) 교내 8,350원(80% 정부 지원, 20% 대학 대응 투자), 교외 10,500원
  - \* 근로시간 제한 : (1일) 8시간, (1주)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1학기) 450시간  
연 평균 근로시간 : (교내) 330시간, (교외) 323시간

**②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개요**

- 대학생의 다문화 인식 및 나눔 문화 제고, 다문화·탈북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10년~)

수혜 대상

- (대상 학년) 학부 재학생 전학년
- (성적·소득 기준) 없음 (계속장학생 기준도 별도로 없음)
- (선발 방식) 지도교수 추천자에 한해, 연간 단위로 대학이 선발

지원 범위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예산 및 지원규모) 6,750백만 원 (지원 규모 : 4,227명 내외)
- (근로시급) 평균 13천원(도시 12,500원, 농촌 15,000원)

\* 근로시간 제한 : (1일) 8시간, (1주) 학기중 20시간, 방학중 40시간, (1학기) 450시간  
연간 평균 근로시간 : 130시간

**학비1-5**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제도 개요

- '18학년도부터 4~5년 간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및 절차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 (절차) 별도 절차 없이 학교가 직접 입학금 경감 및 폐지 통보

지원 내용

- (국·공립대학교)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전면 폐지
- (4년제 사립대학교) '21~'22년까지 매년 입학금 16~20% 감축 (평균 입학금 금액에 따라 감축 기간·비율 차이)
- (전문대학교) '22년까지 5년 간 매년 13.4%씩 입학금 감축

□ **청년 삶의 문제점**

- 장학금 등으로 학비·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활용하나, 사회진출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 **관련 주요 정책 현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생활비 등 대학 재학 중 필요한 학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잔여 학업기간 및 취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내에 상환하는 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여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여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 **(학자금 상환 부담 경감)** 지연배상금 감면제도 등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청년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자 중 취업을 못하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에 못미쳐 상환을 시작하지 못한 비중이 높음
- ➔ 취업 전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상환의 모럴 해저드도 방지하는 방안
- ➔ 학자금대출 부담을 경감할 경우, 우선 지원할 대상자와 지원내용

**학비2-1****학자금대출 제도 개요(교육부)****① 추진현황**

- (대출실적) 학자금 대출은 총 32만 명에게 약 9천 6백억 원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4천 3백억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천 3백억 원 대출

(단위 : 건, 억 원)

구 분	인 원	금 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79,059	4,30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144,823	5,311
<b>합 계</b>	<b>323,882</b>	<b>9,612</b>

- (대출금리)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19년 1학기 대출금리 동결(2.2%)

&lt; 최근 5년간('15년~'19년)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gt;

2015		2016		2017		2018		2019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9%	2.7%	2.5%	2.25%	2.2%	2.2%	2.2%	2.2%	2.2%

- (전달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② 대출자격****□ 공통**

-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신용요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③ 대출한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 대출 허용

**① 일반상환 학자금 자체 프리 워크아웃 제도**

**제도 개요**

-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상환 학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를 대상으로 조기 분할상환,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도록 지원

**지원 내용**

- 약정 시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 약정 가능

**전달 체계**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②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제도 개요**

-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상환능력이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지연배상금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지원 내용**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손해금 감면
  - \* 구상채권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기한이익 상실 채권) 손해금 감면
  - \* 기한이익 상실 :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
-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신청 가능

**전달 체계**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③ 분할상환제도

#### □ 제도 개요

- 학자금대출을 장기 연체할 경우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 지원 내용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분할상환, 재단 학자금대출 분할상환
  - 분할상환 기간 : 기본 10년 이내
  - 분할상환 최소 초입금 :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 분할상환 시 혜택 : 채무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유의정보 해제

#### □ 전달 체계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④ 학자금 유예 대출

#### □ 제도 개요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대학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 대해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 □ 지원 내용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 3년) 동안 발생하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
- 학생은 같은 금액을 유예종료 후 4년 동안 분할상환하거나, 유예종료 후 유예대출만기일(4년 후)에 전액 일시 상환

#### □ 전달 체계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청년 삶의 문제점

- 청년기는 교육, 취업준비, 주거 자립, 결혼 및 육아 등에 따른 생활 자금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이나,
- 담보물·신용 부족 등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저신용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

□ 관련 정책 현황

- **(청년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장학재단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회복을 지원
- **(사회초년생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이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체계 개선
-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무주택 청년층 가구에 낮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자금 지원
- **(청년 금융교육 지원)** 우리나라 청년층의 금융 지식 수준 제고를 위해 대학생·취준생·군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대출 등 금융상품 이용에 있어 **청년들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기존의 담보물, 소득, 신용평가지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방안
- **학자금 대출 외 취준생 및 취업초기 청년층에 대한 지원 방안**
  - \* 대학생 학자금의 경우 낮은 금리(2~5% 수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청년층의 경우 고금리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6.6~17%) 그에 따라 연체비율도 높은 상황(대출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4.7%가 연체를 경험, 청년층의 경우 15.2%가 연체를 경험)
- **'금융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교육 방안**

- (취지)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와 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연계 강화
- (대상)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용자 및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청년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채무조정제도 안내 활성화, 채무조정 연계지원 및 신용교육 인센티브(학자금대출 연체이자를 일부 감면) 제공 등
  - (전달체계)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장학재단
- (추진일정) '18.12.27. 시행
- 추진실적
  - 신용회복위원회 → 장학재단 연계 : 435명
  - 장학재단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 3,067명

- **(목적)**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청년층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

\* (금융이력 부족자) 최근 2년 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내 대출경험이 없는 자(20대 청년층은 약 330만 명)

- **(대상)**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만19~34세) 및 대학생

- **(주요내용)** 금융이력 부족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 **(지원내용)** 그간 신용정보회사에서 개인신용평가 시 반영하는 정보가 사회보험료, 통신비 납부실적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민간보험료 납부정보, 체크카드 사용실적 등으로 확대

\* 실적이 좋은 비금융정보 등록 시 신용점수 가점폭 확대(ex. 기존 5~17점 → 최대 50점, 신용점수는 1,000점 만점)

- **(전달체계)** 각 신용정보회사

- **추진일정**

- ('18년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발표
- ('19년 하반기)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 및 민간보험료 납부정보 등 반영 등 후속조치 추진중(「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 추진중)

- (취지) 청년층의 신용·재산관리, 진로 탐색 등을 위한 금융교육 실시를 통해 금융이해도 제고
- (대상) 모든 청년(만19~34세) 및 대학생
- (주요내용) 청년층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 (전달체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금융교육 콘텐츠 마련 및 전달)
- (추진일정) '07년부터 시작하여 '19년 현재 계속
- 추진실적
  - '18년 중 대학생 14만 명 등 약 35만 명의 청년에게 금융교육 제공
  - '19년중 대학생 15만명 등 약 40만명의 청년에게 금융교육 제공을 목표로 추진중

□ 문제점

- 청년기는 미래 대비를 위해 “종잣돈”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저축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관련 정책 현황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이 2400만원을 보태어 만기 시 3천만원의 목돈 마련 (생애 첫 취업 시 가입 가능)
-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30만원을 보태 월 40만원씩 적립, 3년 후 약 1,500만원의 목돈 마련
- **(근로 인센티브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생기는 만큼 생계급여 액수가 줄어들어 일할 유인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청년의 경우에는 소득이 생기더라도 생계급여를 일정 수준 유지
  - \* 24세 이하 근로 청년은 소득 중 “40만원+나머지의 30%”를 기준소득에서 공제
-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장병 내일준비 적금’ 등 군생활 기간 중 급여를 기반으로 자산 형성 지원(우대금리·세제혜택)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 과제

-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각종 근로 인센티브 사업들은 근본적으로 청년의 근속 및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함
- ➔ 자산형성 사업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이 청년 친화적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해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안
-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실제로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 청년들이 마련한 목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 목적

-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장기근속하도록 유도

□ 개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
  - (청년) 만 15~34세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2년형]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2년간 900만원 적립 (6개월 단위로 가상계좌에 적립)
  - (기업→청년) 2년간 400만원 적립 (6개월 단위로 가상계좌에 적립)
-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3년형]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정부→청년) 3년간 1800만원 적립 (6개월 단위로 가상계좌에 적립)
  - (기업→청년) 3년간 600만원 적립 (6개월 단위로 가상계좌에 적립)
-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원 목돈 마련

- (전달체계)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정한 운영기관에서 자격을 심사한 후 기업과 지원협약 체결

□ 목표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

□ 개요

- (지원대상) 취업 상태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 (지원내용) 매월 청년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국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적립 → 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이자” 마련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20% 이하이며 39세 미만인 사람
- (정부지원액 지급 요건) 가입자가 3년 이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났을 때만 정부지원액 지급 (그 외에는 본인적립금만 지급)

구분	내 용	지 급 액
정상 지급	○ 3년 만기 후 (가칭)희망키움교육 (총6회) 이수,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환수 (지급요건 미충족)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기준 미달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지급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중도 환수해지 사유 - 본인 적립금 6월 연속 미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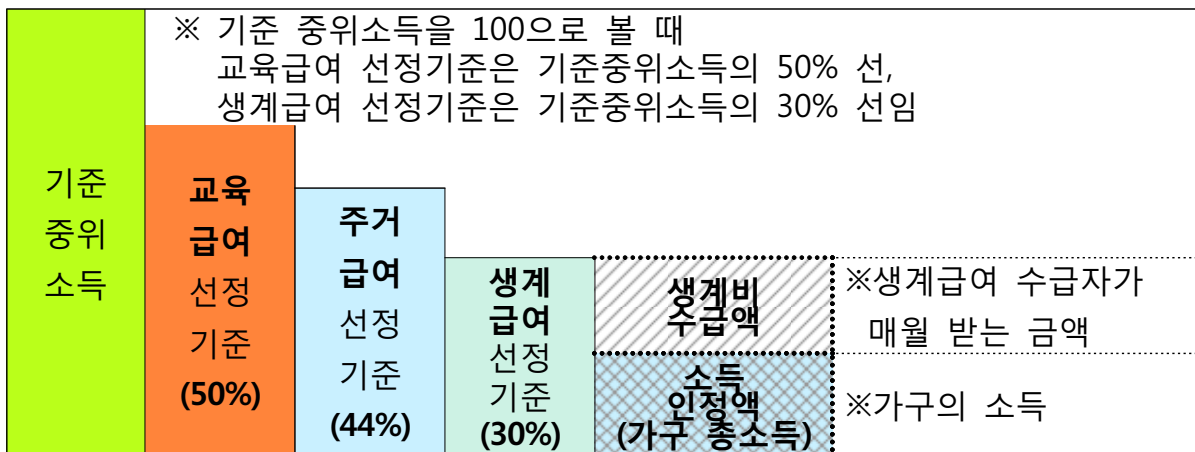
- (전달체계)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19년 예산) 190억 원, (지원규모) 65백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개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교육·주거·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기준)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모자라는 만큼 지급
  -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임

[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지급 구조 ]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 기준 ]

(단위 : 원)

구분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생계급여수급자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의료급여수급자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주거급여수급자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교육급여수급자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주민센터

- (취지) 청년병사의 월급 인상에 맞추어 학자금·취업준비 등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상품 지원
- (대상) 모든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지무요원 등 포함)
- (주요내용) 병사들의 목돈 마련 관련 은행 적금상품
  - 지원내용
    - (금리) 5.3% ~ 5.5% (기본금리 5% 이상, 추가금리는 은행 자율 설정)
    - (월 적립한도) 은행별 20만원으로 장병 개인당 40만원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 (기타) 이자소득 비과세 및 추가적립 인센티브(1%p)
  - (전달체계) 14개 시중은행
  - (예산 및 지원규모) 17억원 ('19년)
- (추진일정) '18.8.29. 상품 출시
- (추진실적) '19.4월 기준 가입자 17만명

- (취지)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 (대상) 만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주요내용
  - (지원내용) ISA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금융 상품별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세제 혜택 부여
    - \* 개인 계좌에 예금성 상품(은행 예·적금, 농·수·신협 예탁금 등) 및 투자성 상품(펀드 등) 등을 담아 운용
    - \* 기관별 상품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소득세 등의 면제
  - (의무가입기간) 3년 단축 운영
    - \* 일반 ISA는 5년 원칙이나 청년의 경우 서민형 ISA와 동일하게 의무가입기간 단축
  - (전달체계) 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사)
  - (추진경과) '16.3월부터 시작하여 '19년 현재 운영중
  - (추진실적) '19.4월 기준 3.7만명(전체 ISA 가입자 수의 약 1.7%), 가입금액 1,011억원



## IV. 문화 · 건강 · 지역



## □ 청년 삶의 문제점

- 경력이 부족한 청년 예술가들은 기존 예술시장의 진입장벽에 부딪혀 작품을 발표할 공간이나 기회 부족
- 이에 따라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발생

## □ 관련 정책 현황

-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문화예술기금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청년예술가(신진작가)에게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 5개 분야(문학, 시각, 다원, 공연, 전통)의 창작활동경비를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 **(청춘마이크사업)** 청년 예술가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무대(야외·박물관 등)에 설 기회를 마련하고, 공연사레비·무대·장비 등 지원
  - \* ('16년) 235개 팀/총 1,008회 공연, ('17년) 152개 팀/총 862회 공연, ('18년) 194개 팀/1,195회 공연, ('19년) 201개 팀 지원, 연간 1,300회 공연(예정)
-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 청년예술가·기획자에게 조사연구비와 창작지원금(1천~3천만 원) 및 강의·멘토링·워크숍·네트워킹 제공
  - \* 분야: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기획, 무대예술분야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예술인 지원사업 중 심사기준 중 개인역량을 “공연·전시 경력 및 수상경력” 등으로 평가할 경우, 청년 예술가가 지원받기 어려움
- ➔ 청년 예술인의 지원사업 진입장벽 완화방안
- ➔ 학력·경력·수상 여부, 무대의 종류와 관계없이 **청년 예술인이 쉽게 시민·대중과 만날 수 있는 지원 방안**

## 문화1-1

### 예비 예술인 첫 공연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 목적

- 청년예술가들이 예술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창작활동이 저조해지는 문제
-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국가적 창의성 제고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

#### □ 개요

- **(지원대상)** 문화예술기금 등 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한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가(신진작가)
- **(지원내용)** 예비·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작품제작 지원
- **(전달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총괄)
- **(예산)** '19년 예산 10억 원

## 문화1-2

### 청춘마이크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 목적

- 청년 예술가가 학력·경력·수상에 관계없이(3無) 설 수 있는 무대를 제공, 문화예술계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

#### □ 개요

-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 문화예술가(장르 무관)
- **(지원내용)** 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공연사례비 및 무대·장비 등 지원)
- **(전달체계)** 전국 권역별 주관단체를 통해 공연비(회당 70~210만 원) 및 무대·음향·스태프·홍보 등 지원
- **(예산)** '19년 예산 37억 원



## □ 문제점

- 청년층은 다른 세대보다 우울증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 충동도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스스로 관리도 어렵고,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은 부족한 실정

## □ 관련 정책 현황

- **(청년국가검진)**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청년**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검진**(20세·30세 각 1회) 실시
  - \* '19년부터 미취업 20~30대 청년층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실시(719만 명), 매년 약 130만 명 우울증 검사 신규 실시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243개소) 및 서비스 전문인력 채용('22년까지 3675명)
  - '19년 시범사업 **“마인드링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학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에 직접 나가 청년들에게 서비스 제공(그룹 인지치료, 휴대폰 앱을 활용한 사례관리, 가족상담 서비스 등)
    - \* 마인드링크 사업: 현재 광주광역시 1개소 실시, 20년 이후 5개소 추가 예정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 과제

- 취업난, 진학·결혼 등 환경변화가 급격하고 장래에 대한 불안이 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
- ➔ 은둔형 외톨이, 울분증세 등 우울·분노를 가진 청년 지원 방안
- ➔ 청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건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 \* 예) 청년층 정신의학과 상담 바우처 지급, 헌혈의 집과 같이 접근성이 높은 철도역, 대학 캠퍼스 등에 정신건강전문상담원 배치 등

□ 국가건강검진

- (개요)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조기 발견하기 위해 진찰·상담·검사를 시행하며, 각 개인은 격년마다 검진받음
- (검진 항목) 약 30여 가지 항목
- (비용) 51,410원(기본검진 : 44,170원, 구강검진 : 7,2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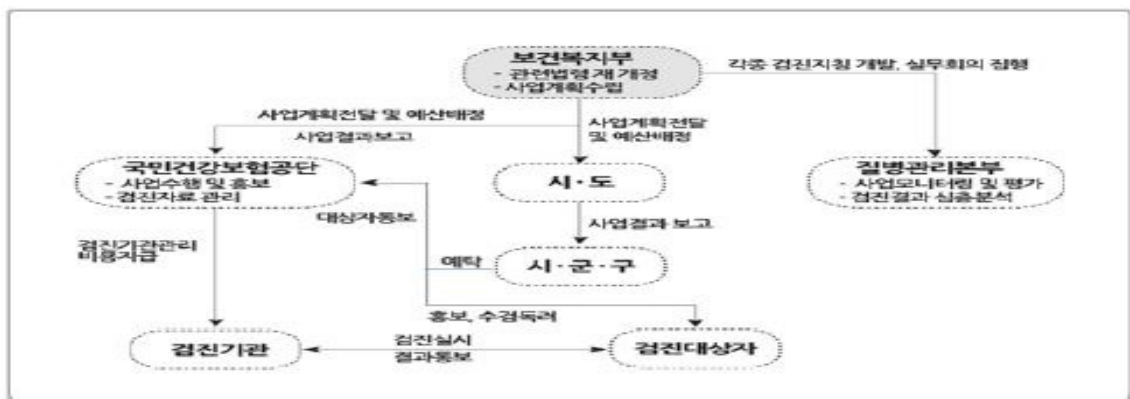
□ 추진 경과

- '19년 20~30대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① 피부양자와 세대원 건강 검진 확대 시행, ② 20세·30세 우울증 검사 실시

\* '18년까지는 청년 본인이 취업·창업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피부양자인 경우, 국가건강검진대상자가 아니었음

□ 전달체계

- 개인이 가까운 병·의원 등 건강검진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의료기관



□ (예산 및 지원규모) '19년 예산 444억 원, 지원규모 719만 명

## □ 목적

- 지역 청년정신건강센터인 “마인드링크”를 운영, 청년들이 걱정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이용하여 회복하도록 지원

## □ 개요

- **(지원대상)** 만 15세~30세로, 정신증상을 경험한지 5년 이내의 질병 초기 단계인 청년 및 청소년

\*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작되기 전의 고위험 단계에서도 이용 가능

- **(지원내용)** 정신증 고위험군 또는 조현병 발병 초기 청년들의 생활관리·치료유지·회복을 위해, 개인상담·그룹인지행동치료·가족상담·증상관리·신체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과 정신건강 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가 근무하며,

-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지 않지만,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 **(전달체계)** 병·의원, 학교, 지역사회 관련 기관이 마인드링크 홈페이지에서 의뢰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며, 청년 스스로 정신건강 상담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 가능

- 이후 담당 전문요원과 면담 및 평가를 거쳐, 증상과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이용실적)** '16년 개소 이후 연 평균 125명이 회원등록 및 장기간 이용, '18년 중 1,350명 단기상담 실시

## □ 청년 삶의 문제점

-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일자리 및 거주여건 때문에 농촌에서 이탈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청년층은 고용상황 악화로 귀농
- 그러나, 귀농한 청년들은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부족과 영농기술·경험부족으로 농촌정착 후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관련 정책 현황

-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중심의 맞춤형 현장 귀농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기관 양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발, 조기에 영농창업에 성공하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
- (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산업 분야의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 기회 제공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정부에서는 청년 귀농 및 청년농업인에게 영농활동에 필요한 교육,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 농지를 구하기 어렵고, 지원정책이 기존에 정착하고 있는 기업농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
- ➔ 청년귀농·가족 중소농에 대한 시급한 지원 정책과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청년귀농 정책

- (목적) 청년귀농 확대를 통한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중심의 맞춤형 현장 귀농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기관 양성
- (대상)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귀농예정 청년으로 귀농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춘 자 우선 선발(수료기준 출석 80% 달성)
  - 교육 중 및 수료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창농이 가능한 자
    - 농촌관련 체험활동 3개월 이상인 자 우대
    - 주소지를 농촌지역으로 이전한 자 우대
    - 증빙이 가능한 기타 귀농교육 수료자 우대
  - 정부 정규 농업학교(농고, 농대, 한국농수산대학 등) 지원을 받은 자 및 후계농, 승계농 대상(가능) 자, 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제외
- 주요내용
  - (지원한도) 교육 인원은 교육농장 개소당 5~10명 이내, 국비지원금으로 인당 7,840천 원 지원
  - (지원수준) 1인당 11,200천원의 교육비 중 개인 부담은 1,680천원 (6개월간 숙박비, 식비, 교육비, 현장실습비 중 일부 금액)
    - \* 국고 7,840천원, 운영기관 자부담 1,680천원/인, 교육생 자부담 1,680천원
  - 교육 수료 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자금 융자시 선정심사 면제(이주기간, 거주기간, 융자조건 구비시 선정심사 없이 선정)
  - (지원절차) '귀농귀촌종합센터 공지사항'에서 공고확인 → 교육기관에서 개별면접 →선발

## 지역1-2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목적)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선발, 조기에 영농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농지·자금·기술교육 등을 종합지원
- (대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농업인(독립 예정자 포함)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영농 초기 소득이 낮은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농가 경영비·생활안정자금) 지원
  - (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심사하여 청년농을 선발한 후,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19년 예산) 214억 원, (지원규모) 연 16백 명 ('19년)

## 지역1-3

### 농업법인 취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목적) 농산업 분야의 인턴취업을 통해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부여와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 (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청년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에서 월 보수의 50% 이내, 연간 600만원(최대 6개월) 까지
  - (전달체계) 농림수산물문화정보원 주관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농업법인 및 청년 선발·매칭으로 인턴 지원비 지급
  - ('19년 예산) 123억 원, (지원규모) 2백 명
  - (추진실적) 법인 78개소, 청년인턴 109명('19.5월), 76명 정규직 전환

## □ 문제점

- 최근 많은 지역들에서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문화발전을 동력으로 한 지역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의 역할은 제한적**

## □ 관련 정책 현황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들이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해결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여건 조성 지원
- (**청년 두레 지원**) 청년들이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숙박·음식·체험 등 관광분야 사업체를 창업·경영개선 하도록 지원
- (**도시재생사업 시 복합시설 설치**) 구도심 활성화 및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시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시설 설치 유도**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지원**) 지역 청년문화 활동가, 문화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문화기획자로 배치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청년들이 지역공동체의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지역문화 발전** 등을 이끌 수 있는 **정책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 전문인력 육성 등 **지역문화 발전** 등을 위한 **청년활동가 육성 방안**

- (목적) 인구감소 및 유출, 일자리 부족,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 청년들에 대한 지원 필요
    -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여건 조성 지원
  - (대상) 지역 활동 및 정착을 원하는 39세 이하 청년
    - (선발) 예비청년활동가 100명 / 지역활동가 20명
  - 주요내용
    - (지원내용) 교육인원은 교육농장 개소당 5~10명 이내, 국비지원금으로 인당 7,840천원 지원
    - (지원수준) 멘토링(1:5)을 통한 청년들의 공동체 조직,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및 전문가 자문, 현장학습, 지역 네트워크 파티, 경진 대회, 청년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전달체계) 행정안전부 → 용역사 선정(한국지역진흥재단 '17~'19) → 사업 대상자모집 →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19년 예산) 3억 원, (지원규모) 120명
    - (추진일정) 참여자 모집(6월) → 출범식(6월말) → 중간보고회(8월) → 최종보고회(11월초)
    - (추진실적) '17년 32개팀(41명) 지역활동지원, 10여명 활동지역 이전, '18년 청년 94명, 멘토 19명(87.9%) 수료(모집 : 청년 107명, 멘토 21명)
- \* 대표사례: 목포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괜찮아 마을' 대표 교육 수료



## □ 목적

- 청년들이 지역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숙박·음식·체험 등 관광 분야 사업체를 창업·경영개선 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관광 지속가능성 향상

## □ (대상) 19~34세 이하

- (청년두레) 대표가 청년(만34세 이하)이거나, 구성원 일정비율(2/3) 이상이 청년인 주민사업체
- (관광두레) 지역활동가인 '관광두레PD'로 선발·육성되어, 지역현장에서 주민주도 관광사업체의 창업·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청년 사업체

## □ 주요내용

## ○ (지원내용)

- (청년두레) 멘토링, 선진지견학, 홍보마케팅 지원
- (관광두레PD 및 청년PD) 월활동비 240만원, 청년PD는 180만원 기본3년(+추가2년)간 지원
- (전달체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한 지원
- ('19년 예산) 80억 원
- (추진경과) '13년 신설, '18년부터 청년두레 육성 및 청년PD 선발
- (추진실적) '19.3월 현재까지 청년두레 38개(누적), 청년PD 12명(누적) 선발

- (목적)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동화되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주거·일자리 관련 시설·공간 마련
- (대상) 청년 창업자 등(만19~39세)
- 주요내용
  - (지원내용) 도심의 뉴딜사업지역에 청년 창업공간, 주거지원 센터, 임대주택 등을 결합한 **복합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센터) 설치를 유도
    - '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부터는 국비지원 확정 전 “뉴딜사업 운영성과 및 계획평가” 단계에서 관련내용 반영여부 평가
  - (거버넌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은 준비·시행 과정 중 청년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청년 참여 활성화
  - ('19년 예산) 1,142억 원, (지원규모) 10개소
  - (추진일정)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선정(센터 총34개 반영)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선정(센터 총18개 반영)

## □ 목적

- 지역 청년문화 활동가 및 문화관련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문화발전을 촉진하는 전문인력으로 양성
-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를 지역문화 전문인력으로 배치·활용

## □ 지원대상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청년 문화활동가, 문화분야 대학졸업자 등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상근이 가능한 문화기획자(2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 필요)

## □ 지원내용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총 7개 양성기관에 정규과정(입문+지역+통합과정) 및 심화과정(국제교류과정+최종발표회) 운영
  - (전달체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총괄) 외 7개 교육기관에서 실시
  - \* 교육기관 : 부천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세종시문화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지역문화시설(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문화의 집 등)에 지역문화전문인력 채용 지원
  - \* 지역문화시설 인건비 지원: 1인당 월 200만원-지방비 50% 매칭/ 최대 2년
  - (전달체계) 지역문화진흥원



## V. 권리 · 참여



## □ 청년 삶의 문제점

- 사회에 갓 진입한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여,
  - “열정페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취약한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으므로 청년 인권 보호 필요

## □ 관련 정책 현황

-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강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강화 및 사업주 인식전환을 통한 열정페이 근절
- (청년 소비자층 보호정책) 청년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소비자 소비환경 개선
-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보호) 사회초년생 등 취약소비자 대상으로 다단계 등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완료) 및 운용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청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사업주들의 인식변화 등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
- ➔ 노동인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들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 그 외 청년들의 다양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 (목적)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및 청소년들에 대한 근로 조건 보호 강화 및 사업주 인식전환을 통한 열정페이 근절
- 개요
  - (대상)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년 및 청소년 중점 지원
  - (주요내용)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1만 개소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122명)를 통한 기초노동질서 현장 홍보 및 계도 및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
  - (전달체계)
    -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 감독 : 지방노동관서
    - 기초노동질서 홍보 및 청소년 인권교육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및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위촉)
  - (예산 및 지원규모)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연간 1.34억원('19년~)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연간 7.93억원('19년~)
- 추진경과
  -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지도 감독 : '15년부터 시작, '19년 현재 추진중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개소) : '15년부터 시작, '19년 현재 추진중
  -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 : '13년부터 시작, '19년 현재 추진 중 ('10~'12년 최저임금 지킴이로 운영)



## □ 목적

- 청년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품에 대해 조사 추진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근절

## □ 개요

- (대상) 20대 이상 청년층
- (주요내용) 청년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청년소비자 소비환경 개선
- (전달체계)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일정) '19년 현재 지속 추진중

## □ 추진실적

- 소셜데이팅앱 6개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정보 미제공 행위, 구매후기 허위 작성, 가입회원 허위 광고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 실시('19.3월)
- TOEFL, TEPS, TOEIC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19.3월)
  - ①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 ② 성적 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 ③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 (목적) 사회초년생 등 취약소비자 대상으로 특수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 (대상)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
- 주요내용
  - 대학교 등에 피해 예방 포스터 및 리플렛 배포(3월), 대학교 홈페이지, 위원회 계정 유튜브 및 네이버블로그,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물 배포(2~3월)
  - (전달 체계) 공정거래위원회
  - (예산 및 지원규모) '19년 13백만 원
- (추진일정) '19년 현재 지속 추진 중
- (추진실적)
  - 다단계등 특수거래분야 피해예방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동영상) 제작 및 전국 340여개 대학교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19.3월)
  -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홍보물(포스터, 동영상) 게시('19.3월)
  - 위원회 유튜브 및 네이버블로그 계정을 통해 동영상 홍보(진행중)

□ (목적)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청년 근로자들이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할 필요

□ (대상) 근로 청년 등

□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19.1) 및 시행('19.7)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동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전달체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의 '직장내 괴롭힘' 대응 상황 점검 및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조치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추진

## □ 청년 삶의 문제점

- 청년층들은 고용·주거·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으나, 이를 전문으로 상담·해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

## □ 관련 정책 현황

- (군·경 장병 대상 고충상담 및 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 운영) 군·경 현역 및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 및 민원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이들의 권익 구제 및 향상
- (2030세대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일자리, 보육, 각종 생활불편 등 2030세대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청년들의 고충 유발요인 해소 추진
- (2030세대 관련 민원분석)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30세대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각급기관에 환류, 2030세대의 목소리 정책 반영 지원

##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최근 정부에서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 현재는 고충에 대한 단순한 답변·상담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 등 근원적으로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 ➔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고민·고충을 상담하고, 이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권리2-1****군·경 장병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권익위)**

- (목적) 군·경 현역 및 입영 장병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 및 민원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이들의 권익 구제 및 향상
- (대상) 현역 및 입영 장병
- 주요내용
  - (지원내용) 군·경 생활 중 겪는 고충에 대한 상담, 민원신청 방법 안내 및 해소
    - 훈련소, 전방사단, 군·경병원, 장병들의 이용이 많은 역·터미널 등을 찾아 고충상담 이동신문고 운영
  - (전달체계) 권익위, 국방부 및 경찰청 등 협업
  - (예산 및 지원규모) '19년 1.7억원
- (추진일정) '06년부터 시작하여 19년 현재 추진중
- (추진실적) '17.5월이후 현재까지 총 11회 운영, 205건 상담

연도	2017	2018	2019	계
운영	6	4	1	11
상담	69	128	8	205

- (목적) 일자리, 보육, 각종 생활불편 등 2030세대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발굴·개선, 청년들의 고충 유발요인을 근원적 해결
- (대상) 구직 또는 취업중인 청년, 자녀를 양육중인 20~30대 등
- 주요내용
  - 2030세대의 일자리 고충 해소
    - (지원내용) 취업과정의 불편·불공정 유발요인 해소, 퇴직자·일용직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 보완·개선 추진
    - (전달체계) 청년세대 일자리 고충 유발 법령, 지침 등의 개선방안을 수립해 소관기관에 권고, 이행현황을 점검·평가하여 실질적 개선 유도
  - 자녀 보육·교육 관련 고충 해소
    - (지원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입소 등 영유아 보육 관련 불편 해소, 다자녀 가정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등
    - (전달체계) 보육·교육 관련 제도개선 방안의 수립·권고 및 이행 현황 점검,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이행사례 홍보
  - 2030세대 관련 행정서비스 등 생활불편 해소
    - (지원내용) 청년 세대를 위한 생활안전 강화, 주요 정보에 대한 고지·공개 확대, 복잡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 (전달체계) 관련 법령 소관기관에 개선방안 권고, 이행현황 점검·관리
- (추진일정) '17년 이후 '19년 현재까지 지속 추진중
- (추진실적) 총 45건 권고('17.5~'19.5.)

- (목적)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30세대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각급기관에 환류, 2030세대의 목소리 정책 반영 지원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서울)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 (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2030세대

□ 주요내용

- (지원내용) 2030세대의 관심이슈 또는 고충에 관한 민원분석 및 정책 시사점 제시

- 민원 분석 결과와 불편사례를 소관기관에 제공하여 정책참고 자료 활용 지원 및 정책·제도개선 유도, 주기적 활용현황 점검 등

- (전달체계) 권익위

- (추진일정) '17년부터 시작하여 '19년 현재 추진 중

- (추진실적) 총 8건의 이슈·기획 분석 및 33건의 불편사례 발굴('17.5~'19.5)

< 주요 사례 >

- 2017년 2030세대 민원 현황 분석('18.4.)

- (20대) 근로계약, 부당해고 등 고용노동, 군 입대·사회복무요원, 예비군 연기 관련 등 국방 분야 민원 빈발
- (30대) 신도시 관련 집단민원 등 건설·주택 분야, 미세먼지·생활쓰레기·악취 등 환경 분야 민원 다수 제기

- 2030세대 불편사항 발굴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참여조건 완화 요청('18.1월), 임대주택 입주 관련 신혼부부 인정기간 확대 필요('18.2월), 영문 졸업증명서 양식 일원화('19.4월), 휴일 예비군훈련(동미참) 일정 확대 요구('19.4월) 등

□ 청년 삶의 문제점

- 청년층들은 사회이슈와 생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의식이 강하나, 상대적으로 정책개선 등을 소통·해소할 창구는 부족한 실정

□ 관련 정책 현황

- (청년참여 플랫폼 운영) 청년층이 정책결정과 실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사회이슈 논의, 정책제안 등을 위한 플랫폼 운영
- (국민생각함, 청년 정책개선 프로젝트)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제안을 하고 정부정책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 (국민생각함,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 대상으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포상을 실시
- (청년·대학생 금융현장 소통) 청년층 금융 애로사항 해소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청년·대학생의 금융관련 현장소통 추진
- (통일국민협약 도출을 위한 관련 청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공론화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및 논의과제

- 정부에서 국민생각함,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참여와 정책개선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

➔ 소통·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와, 많은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참여 방안



- (목적) 20, 30대가 성평등 문제 등 사회이슈에 관심이 많고 사회변화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으나 실제로 정책결정과 실행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제한적임
  - 현재 정책형성과 실행과정에서 청년 주도적인 정책참여가 필요
  -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다양성, 혐오,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에 대해 논의
- (대상) 20대, 30대 청년
- 주요내용
  - (정책제안) 청년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제안하면, 여가부와 관계 부처가 개선 노력
    - 정책 분과(가족·노동·지역 등) 구성 및 정책 모니터링 등을 거쳐 정책 의제 선정, 분과별 제안을 토대로 토론회 개최
  - (홍보) 정책제안과 연계해 웹툰·영상·캠페인 등 프로젝트 추진
    -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혁신, 정책제안과 관련된 프로그램 발굴·지원
  - (전달체계) 플랫폼 운영 민간수행기관
  - (예산 및 지원규모) '19년 5.7억 원
  - (추진일정) '19년 신규 추진

- (목적) 정부 정책설계·구현 과정에서 대학생 및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 (대상) 대학생, 시민단체 활동 청년층
- 주요내용
  - (지원내용) 청년들이 생활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내용을 발전, 구체화시켜 실제 정부 정책으로 반영, 실현되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
  - (전달체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idea.epeople.go.kr)
- (추진일정) '17년부터 시작하여 '19년 현재 추진 중
- (추진실적)
  - (경희대) '18년, 총 30명 참여, ‘미세먼지 환경 바우처 도입’,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제안’ 등 6건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 국민생각함을 통한 공론화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 사업반영 지원
  - (상명대) '18년 11개 팀 참여,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 ‘차량 내 소화기 배치 의무화 규정 확대’ 등 11건의 제도개선안 마련,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 투표 등을 통해 구체화 및 숙성
  - (행정개혁시민연합) '18년 ‘시민제안대회’ 개최 결과 53건의 제안 발굴, ‘층간소음 해소방안’, ‘성범죄자 알림·고지제도 확대’ 등 우수 제안 4건에 대해 국민생각함 기반 발전, 공론화 지원

(목적)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소년 및 대학생이 정부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통해 정부 정책·행정서비스 제도개선 필요 사항 발굴

(대상) 청소년, 대학생

주요내용

○ (공모주제) 청소년 및 대학생의 입장과 시선에서 바라보는 정부 정책 및 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공모

\* 학생인권, 교육환경 및 생활주변 교내외 생활문제 등 자유주제

○ (전달체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idea.epeople.go.kr)

(추진일정) '18년부터 시작하여 '19년 현재 추진 중  
('19년 공모기간 : '19년 6월 1일 ~ 7월 15일)

(추진실적) '18년, 총 518건 응모, 총 6건 우수제안 선정

순위	공모 제목 및 내용
1등	폐의약품 인식개선을 위한 교내 수거 캠페인을 통해 본 정책제안
2등	도로 교통사고 문제 해결 제안
3등	현장중심/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청소년 진로탐색 제도 개선
체험상	선거는 왜 19금인가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도전(대구시 달성군 마을 환경 개선)
	1인 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규제 방안

**참여1-4****청년·대학생 금융현장 소통(금융위원회)**

- (목적) 청년·대학생의 금융현장소통을 통한 청년층 금융 애로사항 해소 및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 (대상) 만19~34세 청년 및 관련 단체
- 주요내용
  - 청년·대학생 현장메신저(15명) 간담회(분기 1회) 및 청년 관련 특정 소비자 대상 현장소통 간담회(수시)
- (추진일정) '19년 현재 추진중 (상시)
- (추진실적) 청년·대학생 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19.3월)

**참여1-5****통일국민협약의 청년참여 프로그램 지원(통일부)**

- (목적)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공론화
- (대상) 통일·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 (주요내용)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자발적인 대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통일정책에 관한 청년세대 공론화 사업)
  - (전달체계) 관련 단체의 토론 개최 지원
  - (예산 및 지원규모) 총 1천만원 내외(매회 200만원~300만원 내외)
    - \* 지원금액 : 전문가 사례비, 홍보비, 회의비 등 300만원
- (추진일정) 신규 사업, 분기별 1회 개최
- 추진실적
  - 1차 청년대화 「한반도의 바탕을 그리다」, 70여명 참여('19.4)